

## 기조 연설

#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양석동 | 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과장

### 왜 지방인가

첫째 전문적 기술이다. 전문적 기술은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정보화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를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들어 지역혁신전략이 가장 중요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지방은 단순히 중심에서 벗어난 일부가 아니라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체로써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발전,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RHRD 잘 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 단위보다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은 세계은행이나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미흡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 지역내 경제적 수준이 당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도 달해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의 46.3%, 중앙정부 부처는 100%,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 10대 명문대학의 80%, 제조업체의 57%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3:53.7,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4:29.6,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9:29.1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이후 지속되어 왔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인적자

원개발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우수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도권 집중 경제력 격차와 함께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옴에 따라 직종 구조 또한 매우 다른 상황을 보이게 된다.

실제 직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이 집중되어, 서울의 경우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도 단위로 갈수록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중은 줄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지방의 우수 인적자원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근로조건이 양호하며 미래 전망이 밝은 직종이 이렇게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그 지역 소재의 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학생들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로 인해 전체 4년제 대학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다.

2003년 기준 수능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68.8%에 달하는 상황임을 볼 때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04년 기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미충원률은 0.4%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9.9%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렇게 지방대학 기피 양상이 계속될 경우 일부 지방대학은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십 부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기획·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간의 사전 협의·협력이 부재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복투자라든가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KEDI, 2001).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물론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의 압도적 다수(89.9%)가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

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파트너십 미흡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논의할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신설되어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과 관련부처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참여에 소극적인 점 등으로 중앙단위에서의 인적자원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WTO 체제하에서 특정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부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가 기업체나 특정산업에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만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의 정책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지원을 위한 부처간의 협의나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조직간의 관계가 기획과 실행기능으로 나뉘어져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책 대상이거나 정책집행자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KEDI, 200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압도적인 다수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중심성이 바람직하다(70.0%)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간의 연계 부족 지역경제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필요에 걸맞게 인적자원이 양성되고 공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산업의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처럼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의 인력이 부족할 때, 다른 지역의 인력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역내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된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산업과 관련된 인력예측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OECD의 경우, 평생학습(Lifelong Education)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정도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특히 초·중등교육의 질은 바로 해당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정주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초·중등 교육 내실화, 지방대학의 혁신, 평생학습체계 구현 등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 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하여 우수한 자녀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지역학습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로는 지역별 산업구조, 노동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혁신역량 강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람과 돈과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잘 분산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이 잘살고 활력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 산업발전, 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혁신체계란 대학, 기업, 지자체, NGO, 지방언론 및 연구소 등 지역내 혁신주체들간의 활발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과정, 행정제도 개혁,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혁신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발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 인재의 지방정착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은 이러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역량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지역혁신역량 속에서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과 연구된 기술로 대규모 굴뚝산업의 집적이 없이도 지역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기술형 지식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역인적자원의 고용축진 및 정착지원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어려움, 대기업 선호경향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경력직 위주의 채용구조,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무환경 등 경제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다양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사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수준에서의 고용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간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NURI) 추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참여정부가 최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사업 중 최초로 실행하는 것으로 수도권-지방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비전 아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장 적응력 있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와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 지방대학의 112개의 우수 사업단(대형 25개, 중형25개, 소형 62개)을 선정하여 동 년도에 2,200억원을 지원하였고 동

사업단은 연차평가 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5년간 계속지원을 받으며, 향후 선정될 신규 사업단을 포함, 2005년도 2400억원, 2006년 2700억원, 2007년 3000억원, 2008년 3,400억원씩 총 1조 3,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검토 및 추천을 거쳐 추천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누리사업은 신청 사업 분야의 제한 없이 전문대학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지방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 향상,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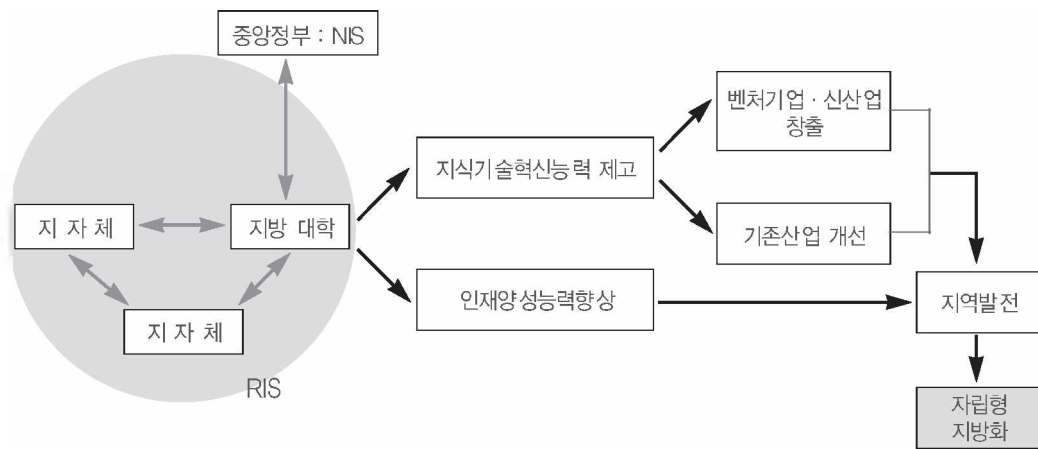


그림 1. 지역혁신체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출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즉, 각 사업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선·운영 계획, 산학협력 프로그램,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단 참여 학부(또는 학과, 전공)는 5년간의 집중투자 및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이루어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2004년도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총 454개 사업단 중 전략산업과 관련된 신청 사업단은 165개이며 이중 5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지역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 사업은 기계 자동차 분야 6개, IT분야 7개, BT분야

4개, NT분야 4개, CT분야 3개, 물류 분야 1개로 2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중형사업에서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10개 사업단, 소형사업에서 섬유, 홈네트워크 등 15개 사업단이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신청·선정되었다. 2004년에 선정된 사업단은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을 위해 이미 지정한 6개 시범단지 중 수도권을 제외한 5개 단지의 전략산업과도 일치하고 있어,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외에 관광, 디자인, 의료, 환경, 복지, 해양,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교육프로그램들이 선정되었다.

누리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누리사업의 지원방안을 차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 지역전략산업의 발전단계별 지원방안 예시

구 분	해당지역 산업(예시)	중점 지원분야
성숙단계	자동차(울산), 항만물류(부산) 지식기반기계(경남), 섬유(대구)	· 기존 산업분야별 핵심필요인력 양성 및 교육
초기 진입단계	의료기기(강원), 광(光)산업(광주), 전자정보기기(충남), 정보통신(대전)	· 신규 급성장 예상산업의 소요 핵심인력의 연차별 양성
태동단계	영상·IT(부산), 대체에너지(전북), 차세대전지(충북), 생물(전남) 등	· 창업보육 및 교육 · 신산업 창출 인력 양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동차(울산), 지식기반기계(경남), 항만물류(부산) 등과 같이 지역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른 곳의 경우 누리사업은 기존 산업 분야 및 핵심필요인력양성 및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좋

다. 의료기기(강원), 전자정보기기(충남), 광산업(광주) 등과 같이 지역산업이 초기진입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규 급성장 예상 산업의 소요 핵심 인력을 연차별로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상·IT(부산), 대체에너지(전북) 등과 같이 산업이 태동단계에 머무른 지역은 창업 보육 및 교육과 신산업 창출인력의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존 산업이

전무하거나 미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지역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및 창업 보육 강화, 기술경영 및 기업가 정신 등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누리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정책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고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지역전략산업 분야별 신청 및 선정사업단 수

구 분	전략산업 분야 및 선정사업단 수				계
부산광역시	항만물류 (3 → 1)	기계부품소재 (7 → 0)	관광컨벤션 (6 → 0)	영상·IT (7 → 3)	23 →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메카트로닉스 (2 → 1)	전자정보기기 (6 → 5)	철유 (3 → 1)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 분야는 대구/경북 중복	23 → 11
	신소재 (1 → 1)	문화관광 (4 → 2)	생물·한방 (7 → 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산업 (1 → 1)	디지털전자정보 (2 → 2)	첨단부품/소재 (1 → 1)	문화 (5 → 2)	21 → 8
	생물 (5 → 0)	신소재 (1 → 0)	조선 (1 → 1)	관광 (5 → 1)	
대전광역시	정보통신 (4 → 1)	바이오 (4 → 0)	차세대진지 (0 → 0)	메카트로닉스 (5 → 0)	13 → 1
울산광역시	자동차 (1 → 1)	조선해양 (1 → 1)	정밀화학 (1 → 1)	환경 (1 → 0)	4 → 3
충청북도	바이오 (4 → 2)	전자정보 (5 → 2)	반도체 (0 → 0)	2차진지 (0 → 0)	12 → 4
충청남도	적차·정보기기 (9 → 2)	자동차·자동차부품 (2 → 2)	첨단문화 (9 → 1)	관광 (4 → 0)	24 → 5
강원도	바이오 (3 → 2)	의료기기 (2 → 1)	관광문화 (5 → 2)	신소재 (1 → 1)	11 → 6
전라북도	자동차부품/기계 (4 → 1)	방산신기한생명 (3 → 0)	대체에너지 (1 → 0)	전통문화관광 (5 → 2)	16 → 3
경상남도	기계 (2 → 1)	로봇 (1 → 1)	휴먼프릭 (4 → 1)	생명공학 (5 → 0)	12 → 3
제주도	관광 (1 → 1)	건강뷰티·생물 (0 → 0)	친환경농업생명 (2 → 1)	디지털컨텐츠 (0 → 0)	3 → 2
합 계					165 → 50



이 사업에서 지방대학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 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총 7,271명(대학 4,073명, 전문대학 3,198명) 감축하였으며, 교육여건 개선의무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학전체의 신입생을 매년 60% 이상, 교원도 2008년까지 6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과·학부는 신입생을 매년 90% 이상 채워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교원을 80% 이상 확보, 졸업생 취업률도 70% 까지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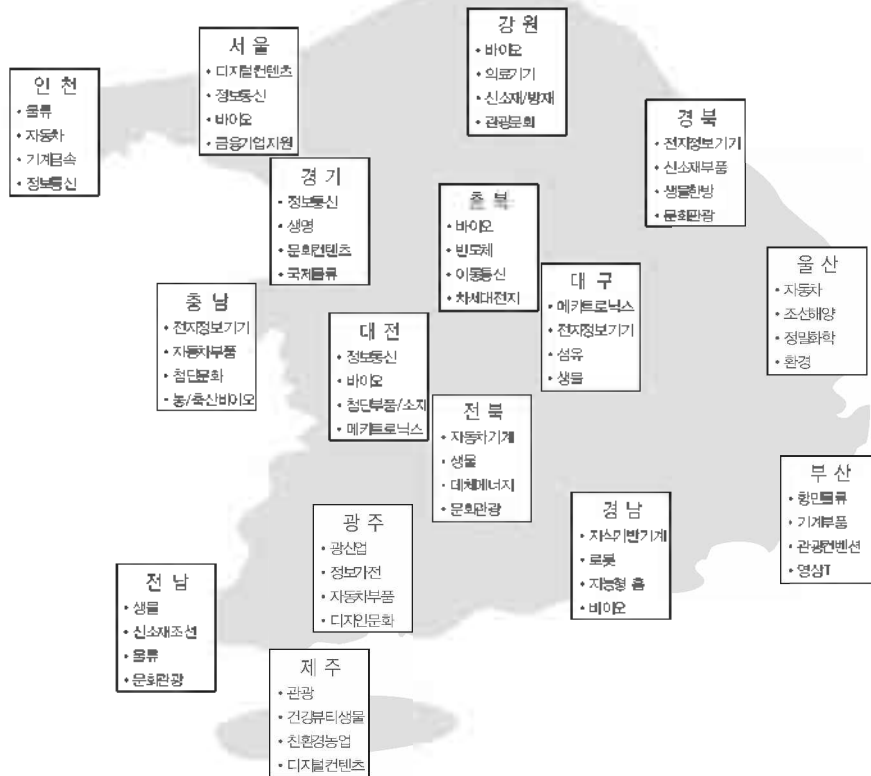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전략산업의 현황

1차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특성화 분야 교원확보율이 12.4% 향상되었고 특성화 분야 학생충원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전년에 비해 6.3%가 증가하는 등(60.2% 66.5%)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경쟁력이 크게 제

고되었다. 또한 현장 적합성 높은 전공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산학연간, 대학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누리사업 참여 113개 대학 중 77개 대학에서 10,341명의 학생정원이 감축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기여하였다.

표 3. 2004년 누리사업 선정 결과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사업단 수	112	25	25	62	
인간지원액	2,135억원	1,032억원	604억원	499억원	
사업단별 평균 지원액 (백만원)	1,906	4,128	2,414	805	
참여 기관	대학 (협력포함)	113교 (응답 제외)	79교	55교	86교
	기타협력 기관	1,000개 (일부 중복)	368개	290개	322개

2004년 1차년도 선정사업단 점검(1차 04. 8., 2차 04. 12.)을 통하여 1차 점검시 허위기재 1개 사업단 선정 취소 및 66개 사업단을 경고조치 하였으며, 2차 점검시 사업비 부적정 집행 6개 사업단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2005년에는 예산 증액분 200억원에 대하여 대형 3, 중형 2, 소형 2 등 총 7개 사업단 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참여 조건을 교원 확보율 56%(04년 50%), 신입생 충원율 80%(04년 60%)로 강화하였다. 2005년 7월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총 112개 사업단 중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였으며 61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생된 잔여사업비(선정취소·사업비 삭감·협력대학 탈퇴 등으로 발생된 279억원)로 예비후보 사업단의 순위에 따라 11개(대형 4, 중형 4, 소형 3)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로써, 누리사업은 2004년에 선정된 105개 사업단(연차평가 결과 7개 탈락 사업단 제외)과 금년 6월에 선정된 7개 신규 사업단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123개 사업단에 총 2,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의 사업계획대로 누리사업이 추진되면 누리사업 참여대학 및 사업단의 학생

충원률이 높아지고 특히 지역 내 우수인력의 유입이 확대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참여대학과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참여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지역산업체 유입비율이 높아지고 지역산업 발전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단 내에서는 대학내 학과간 연계 협력, 대학간 교류 협력이 활발히 나타날 것이며, 참여 대학들은 특성화 분야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시키게 되어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경쟁하기 위하여 지역내 타 대학들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누리사업 참여대학과 사업단의 성과가 지방대학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사회 측면에서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산업의 R&D 기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면 문화 및 복지서비스도 확충되어 지역경제사회에 대한 만족도 내지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상생발전으로 지방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되며,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지역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강화 및 경험 축적, 혁신역량 강화 등을 기반으로 지역여건 및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연차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1차년도 사업기간의 부족(실제 사업기간 약 8개월)과 사업단장 등의 누리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보다는 손쉬운 장학금 지급, 해외 어학 연수 및 인턴십 등에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자한 사례가 많았으며, 사업예산의 과다,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 및 교수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미흡한 누리사업단의 경우 산학협력 전문가 등의 상시 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누리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장, 사업팀장 등에 활동비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누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산자부 4+9 지역전략산업 등)의 연계 강화를 위한 평가시 우대 점수 부여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누리 사업단이 제기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누리사업 재정집행 관리의 문제는 사업의 탄력적 운용 저해 및 사업단이 사업의 성과도출보다는 지침준수에만 치우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누리사업의 공공성 확보 측면과 사업단 운용의 탄력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누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누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단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자체 성과지표 등 사업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충원률이라면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충원여부, 취업률은 취업의 질(상용직 여부, 지역내 취업 여부)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과 교과과정 개편은 그 중요성을 감안, 해당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면밀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학협력실적은 기업인직원의 교수 혹은 겸임교수 채용, 교수의 기업 파견,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실적, 기업재직 근로자의 재교육실적, 창업이나 사업지원 실적 등의 평가를 포함하고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매해 사업년도 종료 전에 지역산업체 및 졸업생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결과 및 그에 대한 대응, 연도별 만족도 증감 추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누리사업 선정사업단이 계획대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선정사업단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연차평가시 장기적 차원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선정 후 현장 점검을 통하여 1개 사업단을 탈락 처리하였고 66개 사업단에 대한 "경고" 조치로 정부의 철저한 사업관리 의지를 인식시킨 바 있다. 일관되고 엄정한 정부의 사업 관리와 더불어 연차평가시 평가팀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대상 사업단에 대해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에 대한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제재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업단이 계획서에서 제시한 필수사업지표 및 기타 자체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 형식의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누리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투자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NURI 사업도 사업 중간 시점에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투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혁신 사업간 중복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네째, 사업단별 누리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자료 등을 DB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평가결과의 검증과 평가지표의 개선 등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과 확산측면에서 본다면 정례적인 누리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peer review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의 선정과 포상을 통하여 다른 사업단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우리나라 대학은 백화점식 학과운영으로 산업화 시대의 인력양성에는 적합한 모형이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다양하고 특화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지방간 격차심화로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과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대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초기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

화, 그에 따른 수도권-지방간의 격차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간 통 폐합,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신규 수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2005년 3월 17일 발족시켰으며, 대학 통합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800억원을 투자하여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학체계를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대학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크게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과 국·공·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결과 '06년도부터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 충주대학교와 청주과학대학 등 8개 국립대학이 4개로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00억원 중 국립대학 통·폐합에 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통·폐

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및 자원 재배분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고려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국립대학 및 지방대학 7개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15개 대학에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들의 반발 등 진통이 있었으나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고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정대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장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중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5.29)에서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혁신체계

(RIS), 지역혁신협의회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과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해 정책 혼선의 최소화 및 윈윈 전략을 구현할 필요가 높아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결과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 추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부산, 광주, 충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시범지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지역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는 시범지역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시·도로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2004년에는 전국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혁신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금번에 구성된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NURI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상호 연계 및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평생학습도시사업, 농어촌교육특별지원사업 등도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지역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초·중등교육의 질은 바로 해당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의 우수한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도 농간 균형발전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까지 농어촌 우수고교 88개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 우수고교 육성,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농특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약칭)농어민 삶의질향상특별법(2004.3.5)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시 농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집과 유치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에 애로가 있는 농어촌 지역 공립 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유치원과 방과 후 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 및 초등학교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7.2%로 매우 저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

원의 지원이 미약하여 평생학습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범국민차원의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3년 9월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직업능력개발 사례의 전파를 위한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에 11개였던 평생학습도시를 2004년에는 19개, 2005년에는 24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4년 제주에서 제3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생학습 대상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적자원의 지역정착 유인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00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2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40

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자가 존재함에도, 중소기업은 14만명의 일손이 부족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데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학이 산학협력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한 '주문식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선발한 후 5개월간 기업 현장에 맞는 직무교육을 하여 중소기업 채용까지 앞선 지원하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으로, 2004년 벤처기업협회 등 42개 보조사업자들이 7,924명을 교육하여 이 중 2,771명이 취업하였다. 2005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공고-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학 재학생에게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중 1개월 이상 장기사업에 약 1만 3천 여명, 7일 이내 단기사업에 10만 여명이 참여하여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

이 개선되었다고 조사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NURI) 추진 누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가 부실한 사업단은 선정 취소 및 사업터 삭감, 사업내용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 예산은 지역추천을 받아 예비후보로 선정된 사업단 지원 및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업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연내 관련 DB 및 On-line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선정사업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각 사업단이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상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사업은 이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및 시도별 지역전략산업분야와 연계되어 추진함으로써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하여 지역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업단 참여 분야는 5년간의 집중투자와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졸업생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특성화계획과 재정지원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조개혁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사업의 경우 대학 통합, 과감한 정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및 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군살을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전문서비스 분야인 경영, 금융, 물류 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하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기 시작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여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협력관' 등의 인사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지역의 실제 산업 및 인력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지역 차원의 기초 실태 조사와 지역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모제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그 사업비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이루어진 인력수요조사를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개설 시 반영하여 지역의 실제 인력수요가 있는 분야에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과

훈련수료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별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중·고교 체제 및 운영모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한 자녀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소규모학교 운영개선, 우수고교 육성,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등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학습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교육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적자원의 지역정착 유인, 지역수준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박사급 연구인력 등의 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생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확대, 대학생 인턴십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동아리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턴십, 현장학기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을 보다 유연화하고, 대학내 취업지원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며, 지역내 취업지원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수 인적자원의 지방 정착을 위한 각종 우인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소재 우수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장학제도를 개선 확대해 나가고, 기숙사 확충, 대학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 현상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